

# 제보사항 관련 조사결과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2022. 3.

서울에너지공사  
감 사 실

일련번호	1	감사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서울에너지공사	종류	인원	조치방법	금액(천원)
	문책	2명	-	-

## 감 사 위 원 회

### 징 계 요 구

**제 목** 「근로기준법」 위반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

**관 계 기 관** 서울에너지공사

**징계 대상자** ① ●부 A

( 행위시 소속 : ○본부 ◇센터 ◆부 )

② ○처 B

( 행위시 소속 : ○본부 ◇센터 ◆부 )

**징 계 종 류** 경징계

**징 계 사 유**

서울에너지공사 ○본부 ◇센터 ◆부의 A는 '19.1.1.부터 '20.12.31.까지 ◇센터내 권역별센터를 총괄 운영하면서 센터내 인력채용 및 운용 업무를 담당하였고, B은 '19.1.1.부터 '19.12.31.까지 A의 바로 위 감독자로 ◆부 업무를 총괄하였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울에너지공사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 제14조에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고, 사용부서장은 기간제 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또는 계약종료일) 30일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기간제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서울에너지공사 ◇센터 □부는 '18.12.31 기간제근로자인 C 등 17명과 '19. 1. 1부터 '19.12.31까지 근로계약을 연장하였다.

또한, 서울에너지공사는 기구 개편에 따라, '19.1.1. 기존 ◇센터 □부는 ◆부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18.12.31. #로 기간제근로자 C의 부당채용 및 연장계약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서울에너지공사 ■실은 '19. 1. 14. 채용부서(◇센터)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연장 계약관련 상충사항의 적합성 검토 확정하여 △부로 통보하도록 하였다.

'19.1.16. ◇센터 ◆부 A는 “# 민원 제기 대응방안”으로 ‘근로계약 재계약 의사 없음 통보’라는 검토 내용을 첨부하여 자신의 바로 위 감독자인 B에게 결재를 득하였으며, 같은 날 C에게 ‘근로계약 재계약 의사 없음 알림’ 문서를 C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19.1.18. ◇센터 ◆부는 기간제근로자 C의 채용 및 연장계약 관련 서울에너지공사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상충하지 않음을 검토 후 △부로 회신하였다.

'19.1.23. 기간제근로자 C은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C의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 해고이므로 C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19.7.22. 서울에너지공사는 ○○위원회로 부터 부당해고 등 판정서를 수령한 후 ●●위원회로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 신청을 하였다.

`19.9.16. 서울에너지공사는 C을 원직 복직시켰고, C이 근로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상당액 16,979천 원을 지급하였다.

`19.10.10. ●●위원회는 서울에너지공사 부당해고 등 구제에 대한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고, `19.11.25. 서울에너지공사는 위 결정을 수용하였다.

## 관련자 주장 및 판단

◆부 A는 서울에너지공사에 `19.1.1. 입사하였고, 당시 입사한지 2주밖에 되지 않아 업무 파악조차 되지 않은 시기였으며, `18.12.31.부 C의 근로계약이 `19.1.1.부터 `19.12.31까지 연장된 것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나, A가 에너지공사 입사전 C과 같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점과 당시 모든 기간제근로자가 동일하게 근로계약이 연장된 점을 고려하면 C의 계약이 연장된 것을 몰랐다는 A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C의 채용 및 근로계약 연장관련 민원처리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 등 법적분쟁에 대한 관계부서의 의견이 있었고, 내부규정상 60세 이상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었음에도 근로계약이 연장된 C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하여 ○○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C을 원직에 복직시켰으며, C이 근로하지 않은 기간(약 8개월)의 임금상당액 16,979천 원을 지급하는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

#로 제기된 C의 채용 및 근로계약 연장관련 민원처리 과정에서 내부회의를 통해 결정된 계약종료 통보를 면밀한 검토 없이 처리하여 결과적으로 부당해고가 되어 서울에너지공사에 손해를 끼친 점은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다.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제55조(징계)에 직원이 명백한 과실로 공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인사규정 시행내규」〔별표5〕‘징계양정기준’에 성실의무 위반 기타사항으로 그 비위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 있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 시행내규〔별표 9〕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단순·반복 업무의 중요사항에 대해 비위행위자(담당자)는 “1”, 바로 위 감독자는 “2”, 2단계 위의 감독자는 “3”, 최고감독자(결재권자)는 “4”로 문책정도의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에너지공사 관계자들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 해고함으로써 근로하지 않은 임금상당액 16,979천 원을 지급하여 서울에너지공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행위는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2호에 해당한다.

## **조치할 사항**

○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서울에너지공사에 손해를 끼친 관련자들을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책)

일련번호	2	감사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서울에너지공사	종류	인원	조치방법	금액(천원)
	문책	1명	-	-

## 감 사 위 원 회

### 징 계 요 구

제 목 외부강의 등 신고관련 규정 위반

관 계 기 관 서울에너지공사 ▲본부

징계 대상자 ○처 B

징 계 종 류 경징계

징 계 사 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2. 외부강의 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3. 외부강의 등의 주제
4.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5.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의2(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의하면, 임직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사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8. 7. 9.>

또한, 임직원은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18. 7. 9.>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사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 5. 27.>

서울특별시 ○에서는 신고시 필수 신고사항으로 신고자 성명, 외부강의 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외부강의 등의 주제, 사례금 총액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외부강의 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안내하였다.

[ 2018 외부강의 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안내 ]

#### < 외부강의 등 서면신고시 필수 신고사항 >

-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외부강의 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 외부강의 등의 주제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미기재)
- 요청자(요청기관) 및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 요청기관 유형 및 외부강의 형태

※ 필수 신고사항 중 일부 누락 신고시 신고요건 불비로 ‘불허’ 가능

서울에너지공사 ◆부(현 ○처) B은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 회의, 강의, 자문 등을 요청받은 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에게 총 20회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신고하면서, 필수 신고사항인 ‘강의시간’을 누락(3회)하거나, 사례금을 다르게 신고(10회), 미신고(1회), 일괄신고를 부적정(8회)하게 신고하였다.

### ① 외부강의 등 신고 시 ‘강의시간’ 누락 (3회)

B은 외부강의 등 신고 시 필수 신고사항인 ‘강의시간’을 3회 누락 신고하였다.

‘20.2.23. ☆☆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고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면서 필수 신고사항인 강의시간을 누락하였다.

### ② 외부강의 등 신고 시 ‘사례금’을 다르게 신고(10회)

‘21.7.16. ☆☆으로부터 회의참석 요청을 받고 외부강의 등 신고하면서 필수 신고사항인 사례금을 다르게 신고하는 등 총 10회 다르게 신고하였다.

외부강의 등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함에도 위 10건을 보완하지도 않았다.

### ③ 외부강의 등 미신고(1회)

B은 ‘21.7.22. ☆☆에서 주관한 회의에 참석하였다.

위 회의는 ♣소재 ‘♣컨퍼런스’ 회의실에서 개최되었고, B은 회의에 참석한 후 사례금으로 273,600원을 수령하였다.

B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 강의시간 및 장소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사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21.7.22. 회의 참석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

#### ④ 외부강의 등 ‘일괄신고’ 부적정(8회)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신고할 때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다.

B은 '21.7.16. ☆☆으로부터 회의 참석 요청을 받고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면서 일괄신고로 월(연) 평균횟수를 5회로 기재하는 등 총 8회 일괄신고 하였다.

그러나, 일괄신고는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 할 수 있음에도 B은 동일한 교육과정이 아닌 회의 또는 평가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4.3. ☆☆에서 주관한 ‘★평가’로 월(연)평균 횟수를 10회, 사례금은 4,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는 1회 참석한 후 사례금으로 364,800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의2(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의하면, 외부강의 등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8건을 보완하지도 않았다.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7호에는 직원이 제규정에 의한 준수 사항을 위배한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인사규정 시행내규」〔별표6〕‘징계양정 개별기준’에는 임직원이 외부강의 신고 의무 및 대가기준 준수 위반 중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견책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관련자 주장 및 판단

B은 외부강의 등 신고시 필수 신고사항인 강의시간을 3회 누락한 것은 서면평가한 것이며, 사례금을 다르게 신고한 것은 추측해서 신고한 것인데 실제 신고한 금액보다 수령

한 금액이 더 적어 보완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21.7.22. ☆☆이 주관한 ♣소재 '♣컨퍼런스' 회의에 참석한 것은 '21.7.16. ◆ 회의 참석 신고서에 일괄신고로 포함된 것이며, 실제 강의한 횟수와 다르게 일괄신고한 것은 실제 강의한 횟수가 신고한 횟수보다 더 적어 보완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필수 신고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이 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의2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7호에 해당한다.

## **조치할 사항**

○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의2 외부강의 등 신고 관련규정을 위반한 B을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문책)

일련번호	3	감사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서울에너지공사	종류	인원	조치방법	금액(천원)
	-	-	-	

## 감 사 위 원 회

### 기 관 경 고

**제 목** 코로나19 백신접종관련 복무지침 미준수

**관 계 기 관** 서울에너지공사

**내 용**

서울특별시 ■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접종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부여하고, 접종다음날 이상반응 발생자에 대해 진단서 필요없는 1일의 ‘병가’를 부여하도록 공직자 복무관리 지침을 시행하였다.

서울에너지공사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관련하여 접종당일에 1일의 ‘공가’를 부여하고, 접종다음날 이상반응 발생자에 대해 진단서 필요없는 1일 ‘병가’를 부여하도록 복무관리 지침을 수립하였다.

서울에너지공사의 임직원 총 284명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일 근태현황을 확인한 결과, 백신접종 당일에 1일의 ‘공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임직원 67명은 백신접종 당일 공가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백신접종일과 공가 날짜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당일에 공가를 사용하지 않은 임직원은 총 41명이고, 나머지 26명은 백신접종일이 아닌 다른 날짜에 공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서울에너지공사 ■실에서는 '21.10.15. \*부로부터 백신 접종일 공가 부정사용 복무지침 위반 감사의뢰를 접수받아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접종 당일 공가를 사용하지 않은 임직원 총 41명에 대해서는 복무방침에 따라 백신접종일을 공가로 처리하였으며,

백신접종일과 공가 날짜가 서로 다른 임직원 총26명에 대해서는 공가 사용일을 개인 연차휴가로 수정하였고, 백신접종일은 공가로 시정 조치하였다.

아울러, '21.12.22. 백신접종일과 공가일을 다르게 사용하고 코로나19 확진자로 감염된 @부 D에 대해 복무지침 위반을 적용해 '경징계' 요구조치하였고, 기타 고의적으로 코로나19관련 복무지침을 위반한 5명에 대해서도 '경고' 등 신분상 조치하였다.

## 조치할 사항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은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관련 복무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본 조사기간중 자체 감사를 통해 시정조치 하였으나, 다수 직원이 복무지침을 위반한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경고합니다. (기관 경고)

일련번호	4	감사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서울에너지공사 (*부)		종류	인원	조치방법
		-	-	금액(천원)

## 감 사 위 원 회

## 통 보

**제 목** 행정재산 무상 사용 · 수익 업무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에너지공사

**내 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5조에 의하면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 · 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서울에너지공사 「재산관리규정」 제3조, 제16조에는 소관재산을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무상사용 대여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재산을 무상사용대여 또는 임대하였을 경우 관리자는 익월 10일까지 총괄자를 경유,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청사 내 강당, 주차장, 테니스장에 대해 지역 주민으로부터 사용 신청을 받고 무상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강당’의 경우에는, 2019년 2월부터 ▲▲협회 등으로부터 대관 신청을 접수 받고 총 19회 대관하였으며, ‘테니스장’의 경우, 2019년경부터 인근지역 동호회로부터 사용 신청을 받고 총 16회 시설을 무료 개방하였으며, ‘주차장’의 경우, 2019년 2월경부터 인근 교회로부터 대관신청을 받고 총 5회 무료 대관하였다.

##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서울에너지공사 「재산관리규정」에 따라 재산을 무상사용대여 또는 임대하였을 경우 관리자는 익월 10일까지 총괄자를 경유,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았다.

## **조치할 사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행정재산의 무상사용에 대해 관리자가 익월 10일까지 총괄자를 경유하여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 「재산관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